

# 행 정 법

##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④	①	②	④	①	④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④	②	②	①	②	③

### 01. [정답] ②

**해설** ㄱ, ㄴ은 옳지 못하다. ㄷ, ㄹ은 타당하다.

ㄱ:[X]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이 아니라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23. 행정작용 전반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공포·시행되었다. 행정기본법 제5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ㄴ:[O]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ㄷ:[X] 감사원규칙은 역시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포함된다. 행정기본법 제2조 가목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ㄹ:[O]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역시 처분의 근거인 법령의 하나로 행정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행정기본법 제2조 가목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

### 사원규칙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 02. [정답] ④

**해설** [X]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6. 5. 16. 95누4810).

①:[O]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 해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대판 1991. 4. 12. 91도218).

•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청으로부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06 국가직 7급] [12 국가직 9급] [X]

②:[O]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는 후에도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2. 7. 27. 81누174).

•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며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갱신이 있는 후에는 갱신 전의 범위반사향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17 경찰경제] [X]

③:[O] 인가는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법률행위인 이상 그 대상이 공법행위인지 사법행위인지는 상관없다. 따라서 강박상 인가로 인해 공법상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私法)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가는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다. ※ 대부분의 인가는 재량행위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학교법인의 이사회소집승인·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은 판례가 기속행위로 인정하였다.

•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적 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 행위일 수도 있다.** [17 국가직 9급] [X]

•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07 국가직 9급] [X]

### 03. [정답] ①

**해설** [O]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X]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③,④:[×] 대법원은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판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 04. [정답] ②

**해설** [×]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 9. 23, 2003두1370). 즉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공개거부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바,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비공개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이다.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판 2008. 10. 23, 2007두1798).  
 ③:[○] 대법원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본다(대판 2003. 12. 11, 2001두8827).  
 ④:[○]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공개청구자에게 있으며,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공공기관에게 있다(대판 2004. 12. 9, 2003두12707).

#### 05. [정답] ④

**해설**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 [1]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 06. [정답] ①

**해설** [×]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채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

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7. 10. 31, 2017도9582).

②,③,④:[○] 대판 2017. 11. 9, 2015다215526.

#### 07. [정답] ④

**해설** [×]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대판 1999.8.20, 99두2611).

①:[○] 현재 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②:[○] 현재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마363).

③:[○] 현재 전원재판부 2006. 2. 23, 2004헌마675 · 981 · 1022(병합).

#### 08. [정답] ①

**해설** [○] 대판 1974. 12. 10, 73누129.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4. 13, 92누17181).

③:[×]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 다(대판 2006. 2. 10, 2003두5686).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청문절차흡결을 이유로 행정심판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6. 25, 93도277).

#### 09. [정답] ②

**해설** ㄷ,ㄹ가 판례의 태도와 부합한다. ㄱ,ㄴ,ㄴ는 옳지 못하다.

ㄱ:[×]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ㄴ:[×]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

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ㄷ, ㄹ:○] 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판례** [1] 구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 10. [정답] ④

**해설** [×]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므로, 관련 인허가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 乙은 甲의 이 사건 공장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기준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판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제1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나 공장설립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목적과 취지, 요건과 효력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1. 6. 24, 2021두33883).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는 특별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점, 원고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아스콘 공장의 건축을 불허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안(재량의 일탈남용 부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등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산업단지입주계약이 체결되면 공장설립승인이 의제된다.

②:○]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별개의 제도이다.

③:○] 입주계약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는 바, 공장설립 승인 받았더라도 건축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공장 건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 11. [정답] ④

**해설**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의하여 이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58).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시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나 손실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일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줄 수는 없다(헌재 2002. 5. 30, 2000헌바58).

## 12. [정답] ④

**해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①:○]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13. [정답] ①

**해설** [○] 모두 타당하지 못하다.

ㄱ:[×]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84·102·103, 2002헌바26 병합).

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54조 제1항).

ㄷ:[×] 행정처분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효력이 있으므로(공정력),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

가 유효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ㄹ:[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7년 개정되어 가산금은 100분의 3,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하 생략〉

#### 14. [정답] ②

**해설** [X]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조사이기본법 제4조 제3항).

①:[O] 행정조사이기본법 제7조 본문

③:[O] 행정조사이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

④:[O] 행정조사이기본법 제20조 제2항

#### 15. [정답] ④

**해설** [X]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행정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 16. [정답] ②

**해설** [X]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다수의견).

#### 17. [정답] ②

**해설** [X]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대판 2000. 5. 26, 99다53247).[국가배상책임 긍정]

#### 18. [정답] ①

**해설** [X]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인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②:[O]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판례**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③:[O] 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적 표시이다.

**판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④:[O]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므로, 널리 알리는 고시에 의하여 효력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만약 일반처분의 경우라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발생요건이다.

**판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 19. [정답] ②

**해설** [X]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4. 7. 24, 2011두30465).

#### 20. [정답] ③

**해설** [O] 사안의 경우처럼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21년 2월 14일부터 90일이 기산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참조.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